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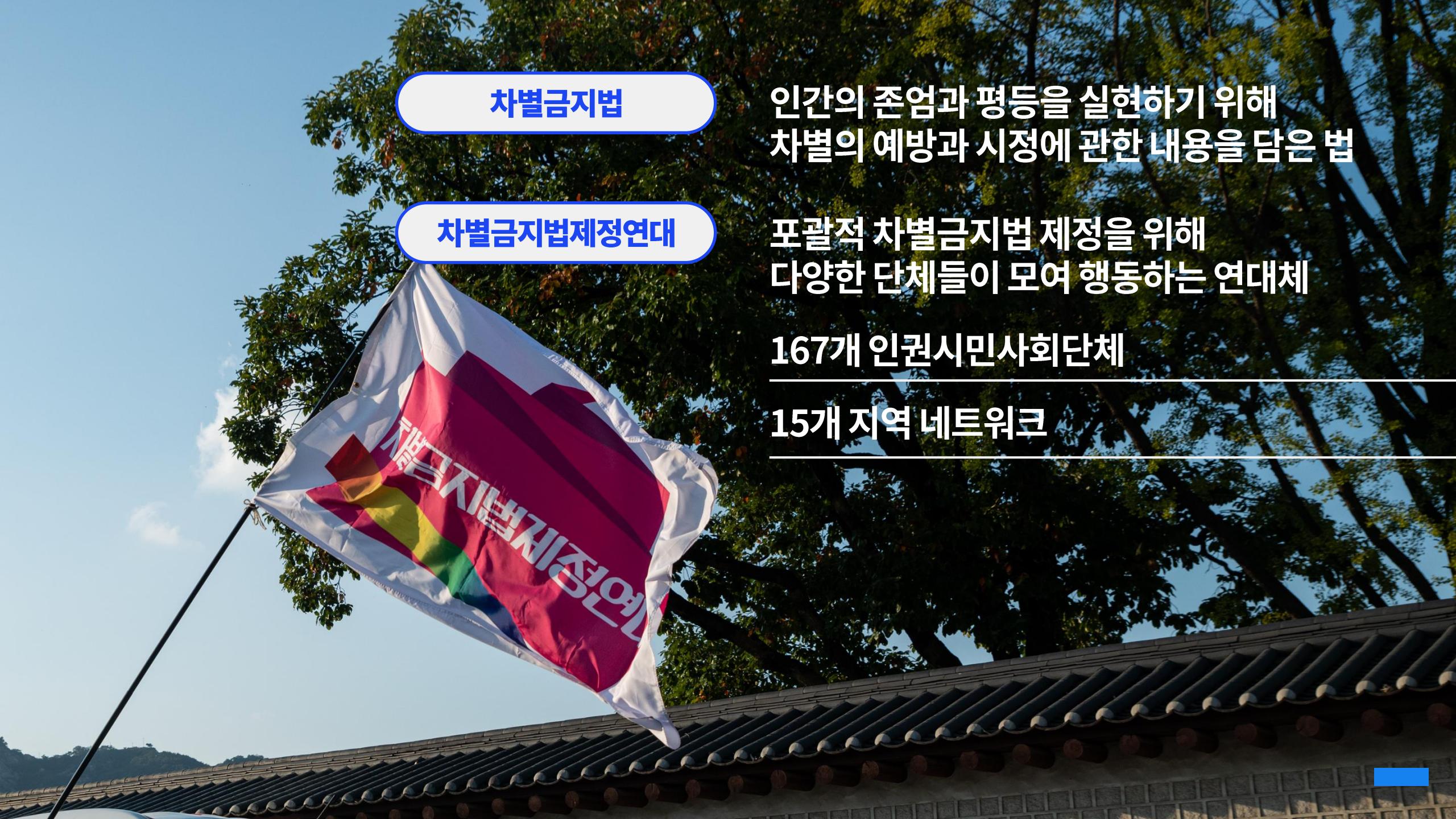
## N개의 기후정의학교 1차



# 기후정의 X 존엄과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후정의동맹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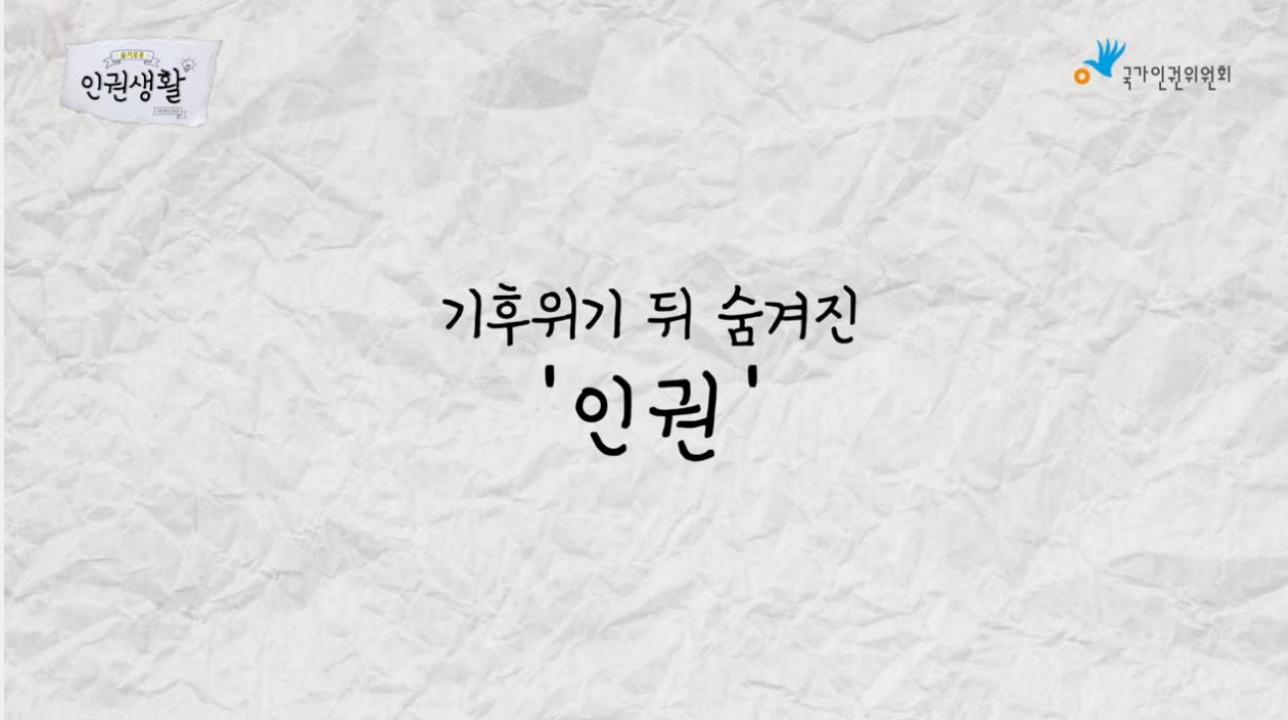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행동하는 연대체

**16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15개 지역 네트워크**

# 기후위기 뒤 ‘숨겨진’ 인권?



“기후변화가 인권의 향유에 함의를 가진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영향이 엄격한 법적 의미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1) 기후변화는 광범한 일련의 인권의 향유를 위태롭게 한다.
- 2) 기후변화는 그러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인권법은 그럼에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각국에 국제협력의무를 포함하여 특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2009)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  
A/HRC/10/61

2009

# 기후위기가 인권의 위기



##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일시 11/26(목) 오후 3시 00분 ~ 5시 30분  
참여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연분홍 TV 유튜브 채널

기조 발제 기후위기와 인권 - 조효재(성공회대)  
증언자1 석탄발전 노동자 - 이태성  
증언자2 건설 노동자 - 이상범  
증언자3 한국 청소년 - 윤현정  
증언자4 농민 - 최창훈  
증언자5 필리핀 청소년 - 미치 조엘로  
사례 발제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사례 - Hasminah D. Paudac(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  
기후위기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계획 발표  
Q&A 시간

주최 기후위기인권그룹, 기후위기 비상행동 후원 인권재단 사람



Climate Crisis is Human Right Crisis, Climate Action is Human Right

“우리는 인권으로 이 기후위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 정신영(공익법센터어필)

2020

# 평등과 비차별, 기후행동의 최전선 원칙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직·간접적으로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12월 30일자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

인권의 맥락에서 기후행동에 적용되는 핵심 원칙  
“평등과 비차별은 국가의 기후행동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

현재

# 기후위기, 차별과 부정의

배제되고 희생되는 사람이 없는, 모두를 위한 ‘정의’



# 기후위기 기후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 ‘기후불평등’, 새로운 인권의 의제



“[서상균그림창] 재난 불평등”, <국제신문>, 2022.8.10

기후위기의 피해는 국가, 지역,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

그리고 “기후재난은 약자를 먼저 덮친다” (빈곤층,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비인간 동물)



“2050년 ‘섬나라’들 수몰”

남태평양 키리바시 섬 “죽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 피난을 온 사람들을  
강제로 본국에 돌려보낼 경우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 유엔자유권위원회, 2020

연안국가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취약한 사람들,  
그리고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직면한 불평등을  
계속해서 회피할 수 없다.”

- 아노테통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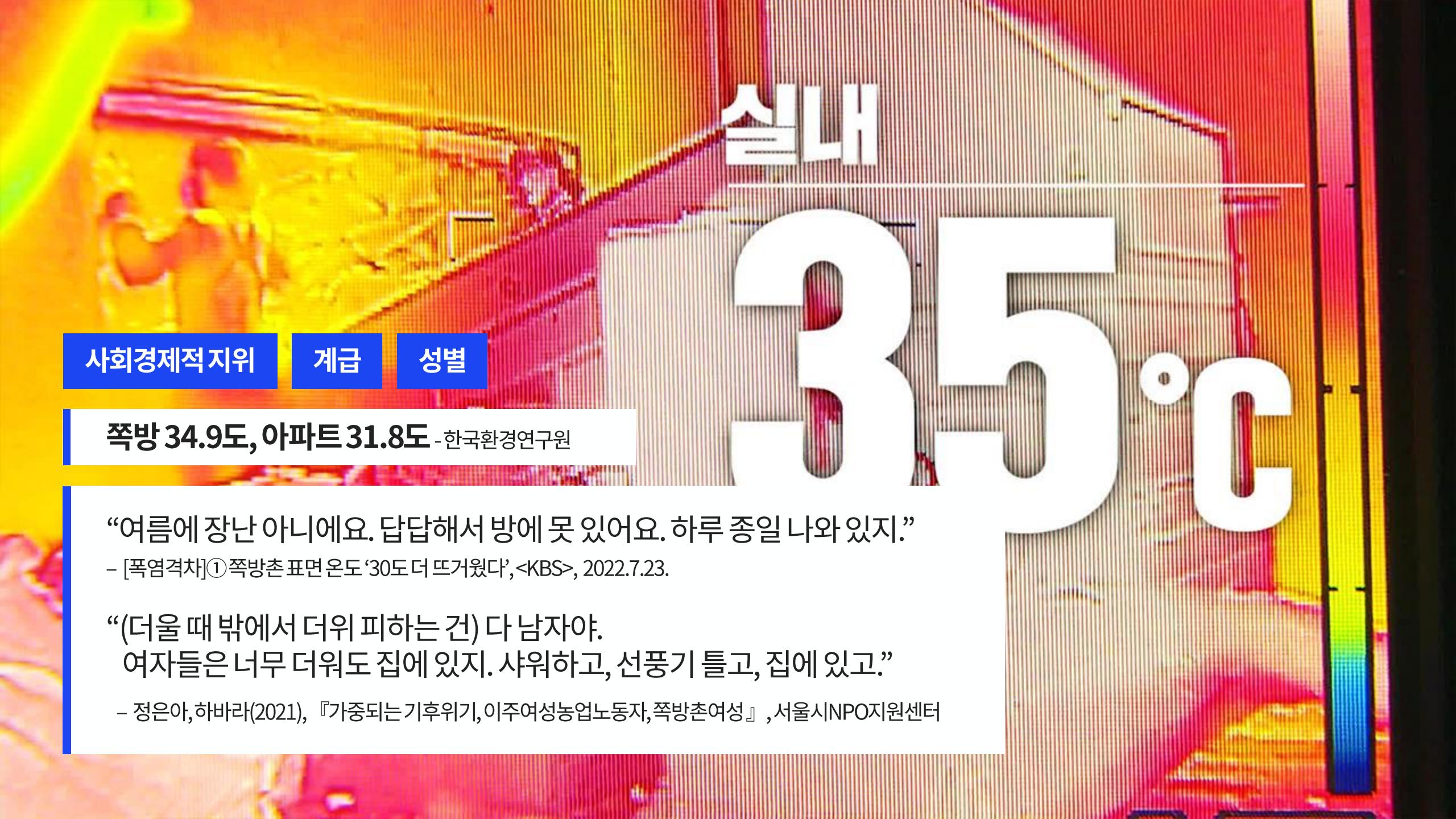
세대

“우리는 지금 여기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 김서경(청소년기후행동)

“... 현재와 미래세대가 공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바,  
미래세대에게 불균등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적 취급이므로,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

-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2023.6.12.





실내

35°C

사회경제적 지위

계급

성별

쪽방 34.9도, 아파트 31.8도 - 한국환경연구원

“여름에 장난 아니에요. 답답해서 방에 못 있어요. 하루 종일 나와 있지.”

- [폭염격차] ① 쪽방촌 표면온도 '30도 더 뜨거웠다', <KBS>, 2022.7.23.

“(더울 때 밖에서 더위 피하는 건) 다 남자야.  
여자들은 너무 더워도 집에 있지. 샤워하고, 선풍기 틀고, 집에 있고.”

- 정은아, 하바라(2021), 『가중되는 기후위기,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 서울시NPO지원센터

# ‘기후재난’, 새로운 인권의 의제

문3. 귀하는 어떤 부분에서 기후변화를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까? (%)									
		사례수	폭염 강도 및 일수 증가	폭우, 태풍 및 장마 증가	폭설 또는 강설일수 감소	가뭄, 대형 산불 및 산불 횟수 증가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 양성 훼손	감염병 발생 및 증가	기타
전체		1500	39.6	25.4	4.7	5.9	15.0	7.9	1.5
집단별	일반국민	500	37.8	26.8	3.4	5.6	17.2	9.2	0.0
	청소년	600	43.0	16.3	7.1	8.2	14.9	7.1	3.4
	취약계층	400	36.5	37.3	2.8	3.0	12.5	7.5	0.5
직업별	농업인	150	33.3	49.3	2.7	2.0	6.7	6.0	0.0
	어업인	50	20.0	36.0	2.0	2.0	30.0	10.0	0.0
	택배근로자	100	47.0	24.0	2.0	5.0	14.0	7.0	1.0
	건설근로자	50	40.0	34.0	4.0	0.0	10.0	12.0	0.0
	방송근로자	50	38.0	32.0	4.0	6.0	12.0	6.0	2.0

배기완 외 (2021)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농업, 어업, 산림업 종사자****온외노동자(특히 비정규직)**

# 평등법/차별금지법상 ‘재난’



“재난 방송 시 반드시 수어통역 배치해야”

##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안, 평등법안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안)

제3조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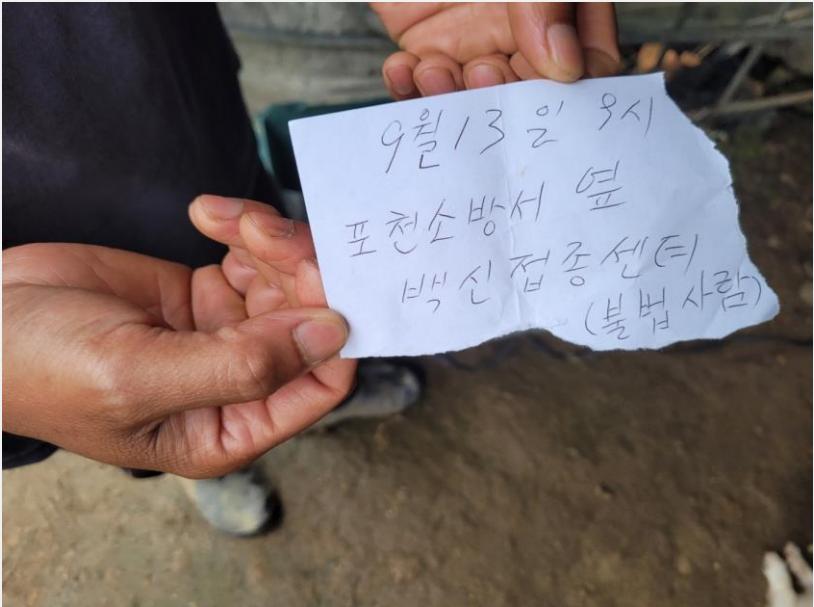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기후민감계층) 유형화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 분석

취약계층 보호, 적응, 역량 강화 대책 마련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의 근거

# 기후위기 시대, 평등권의 의미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의 예방이나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정책은  
영향을 받는 비교집단에 따라 기후위기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에서 나타나는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 이준일(2022), 「기후위기와 헌법 - 기후위기에 대한 기본권 관점의 접근」, 『공법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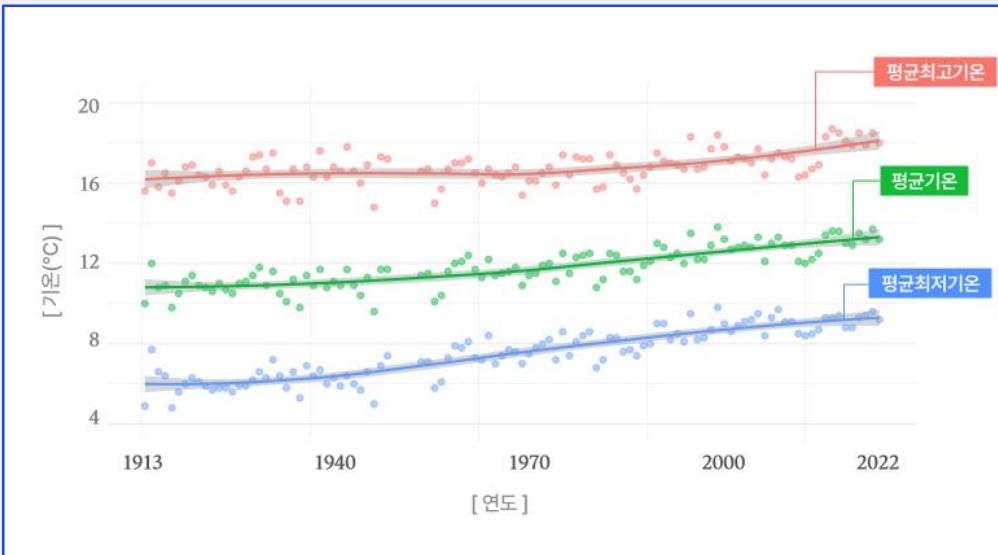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목사가 한 태국인 미등록 노동자(42)에게 써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 및 시간 안내 <서울신문>, 2021.8.29.

‘우대’가 아닌 ‘적극적(개선-평등화) 조치’(Affirmative Action)

‘차별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반차별 정책’(anti-discrimination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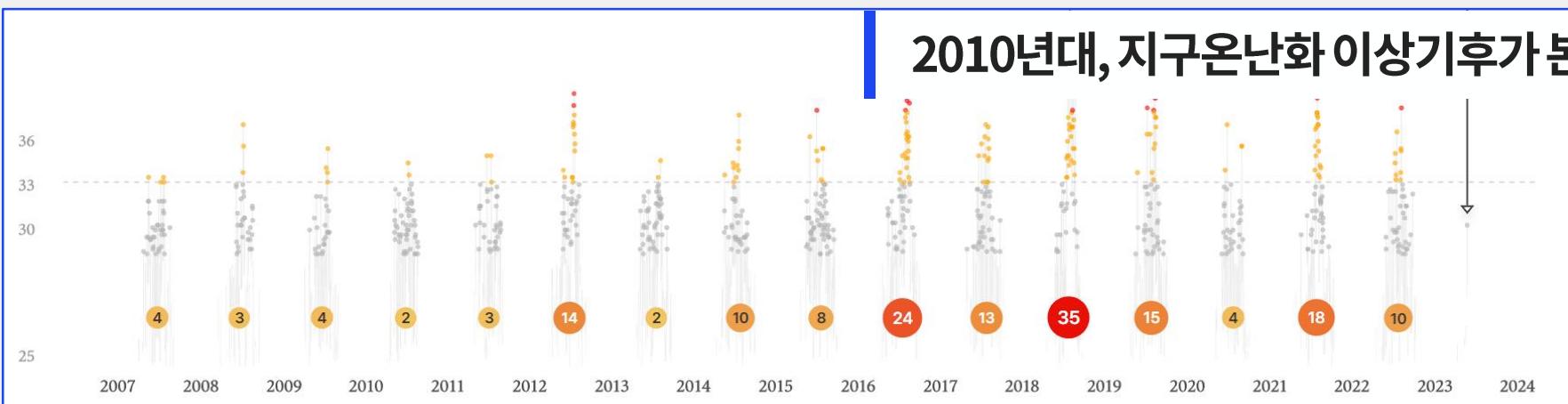
평등에도달하기 위해서는, 과거-현재-미래: 차별의 역사성과 시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

#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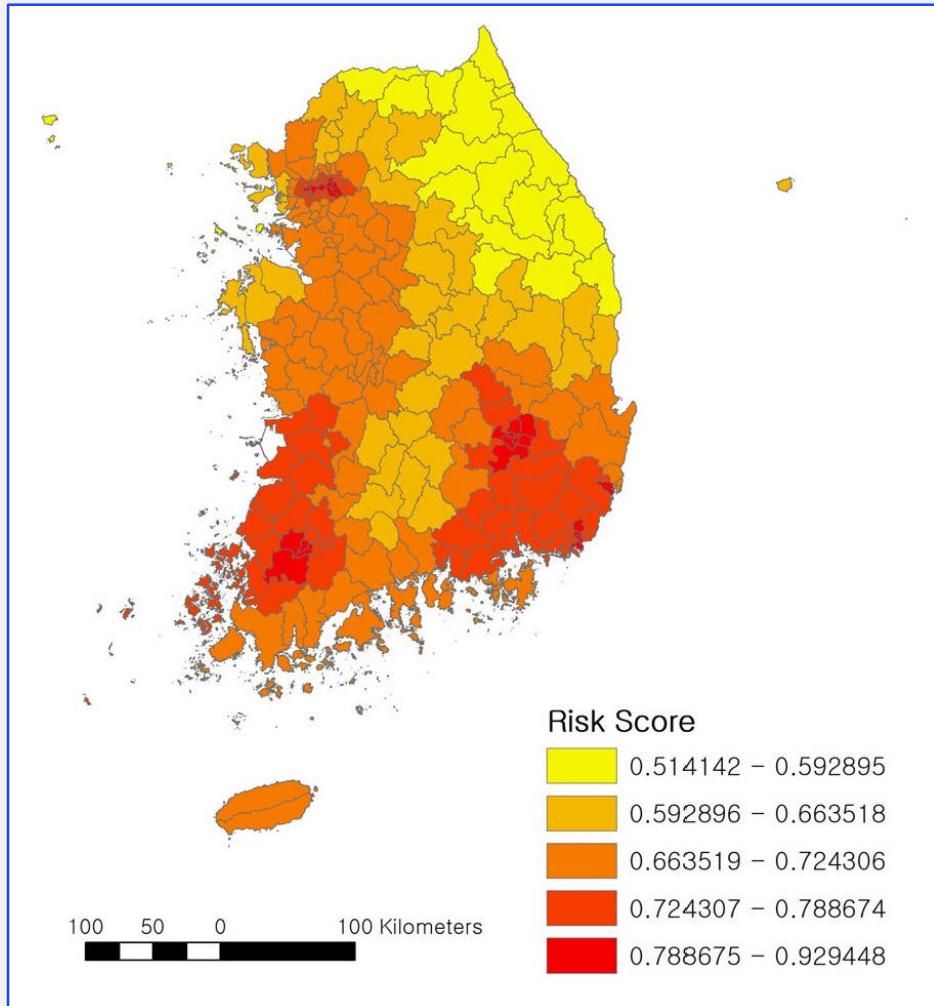
◀ 연도별 평균최고, 평균, 평균최저기온(1913-2022)

▼ 대한민국 폭염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0년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

# 그런데…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만으로?



김근한, 정휘철 (2020)

『지역 불평등을 고려한 기후 정의 평가: 폭염을 중심으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 도시설계

도시화 면적 비율이 높은 대신, 녹지 면적 비율이 낮은…

## 취약계층 지원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율은 높은…

## 보건의료 정책

인구 당 응급의료기관 수는 낮은…

불평등이  
재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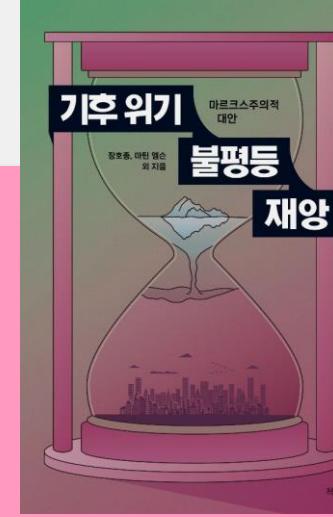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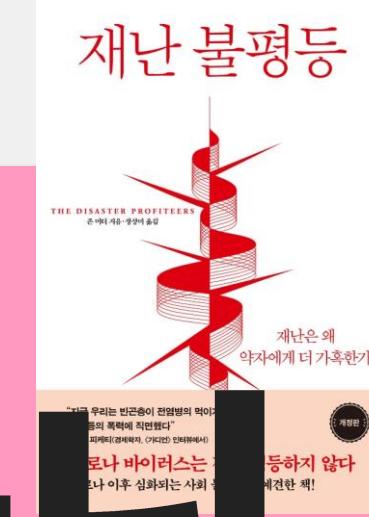
재난불평등주모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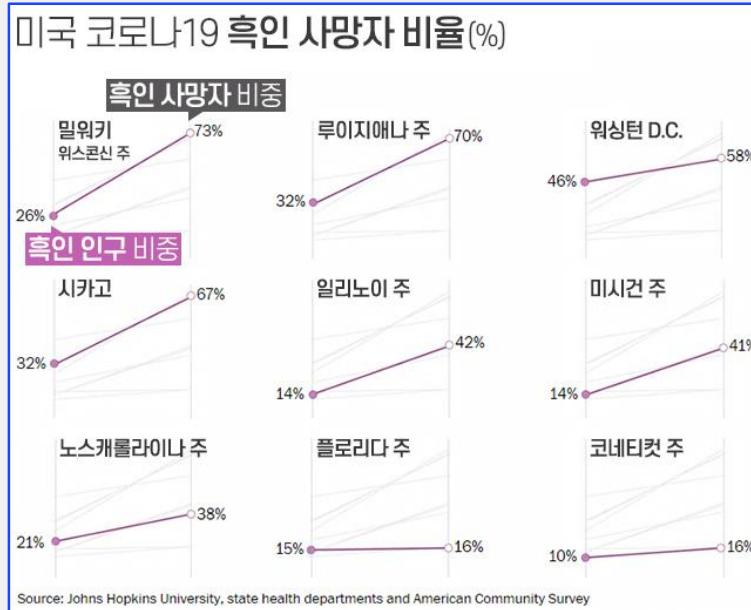
# 기후정의X 존엄과 평등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존엄과 평등을!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을 말하는

# 기후위기 환경이 아닌 정의의 문제라면



# ‘차별의 구조’에 대한 인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위대한 균형자(The Great Equalizer)다.  
바이러스는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유명한 사람인지,  
어디에 살고 몇 살인지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인종주의 또한 팬데믹”(Racism is a pandemic, too)  
“공중보건 위기”(Public Health 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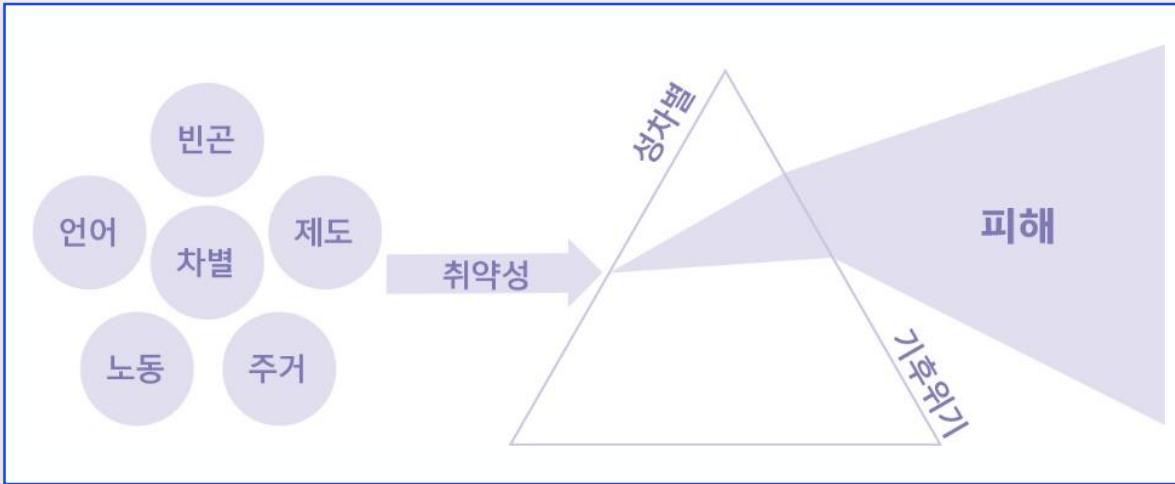
- 정용기(2020), 「미국은 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실패했나: 공중보건과 인종주의의 정치에 관한 탐색」, 『비판사회정책』

**기후재난, 사회적 재난이 차별과 불평등을 키웠다? 물론**

**기존 한국사회 내 차별과 불평등 구조가 기후재난을 통해 가시화, 심화, 확대재생산**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나서 인종정의나 인종차별에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다.”** - 텐다이 아쿠메(유엔인종차별조사관)

# 소수자의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



“내 몸을 지나가는 수많은 ‘차별의 선’들이 있는데,  
그게 기후위기와 만나면  
기존에 있던 차별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정은아, 하바라(2021)

『가중되는 기후위기,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  
서울시NPO지원센터

**쪽방촌 여성 : 체화된 무기력으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팔자소관’이나 ‘운’으로 돌리며 감내하려는 경향**

**가난과 필요를 증명하게 되어 있는 정부 복지체계와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

**‘차별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소수자? →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훼손하는 구조의 문제**

#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식



“… 소수자는 일의 세계를 먼저 겪는 사람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의 세계는 차별을 통하지 않고는 굴러가지 못한다.  
노동의 권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핑계를 더 앞서,  
더 근본적으로 겪는 사람들이 소수자다.

소수자가 겪는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만큼 노동의 권리는 멀어진다.  
소수자의 위치에서 보자는 제안은  
여러 소수자 집단이 처한 현실 ‘도’ 보자는 제안과 다르다.  
일의 세계를 다르게 보자는 제안이며,  
오히려 소수자의 경험으로부터 권리의 가능성을 찾자는 제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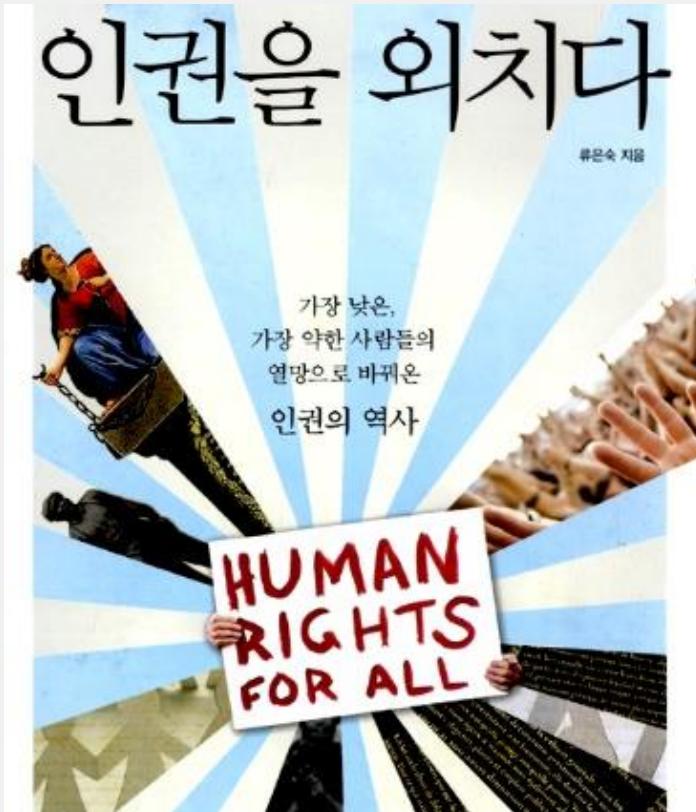
-차별금지법제정연대(2020), 『평등정책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단순히 기후행동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권리 기반 접근 : 차별과 불평등, 취약성을 분석하고 차별적 제도 및 관행, 부당한 권력 분배를 시정해야**

**사회적 소수자들의 민주적 참여, 역량 강화 필수 → 보편적 권리로서 평등권 및 사회권 요구로**

# 인권과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당사자성에 입각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핵심은 자선에 반대하고 인민이 권력과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식의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의미 있는 참여란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정의 결과에 같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실현은 평등하게 권리가 가진 사람들의  
자율성을 활성화하는 것과 병행되는 과정이다.”

-류은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제131호, 2008.12.3.

# 기후정의와 차별금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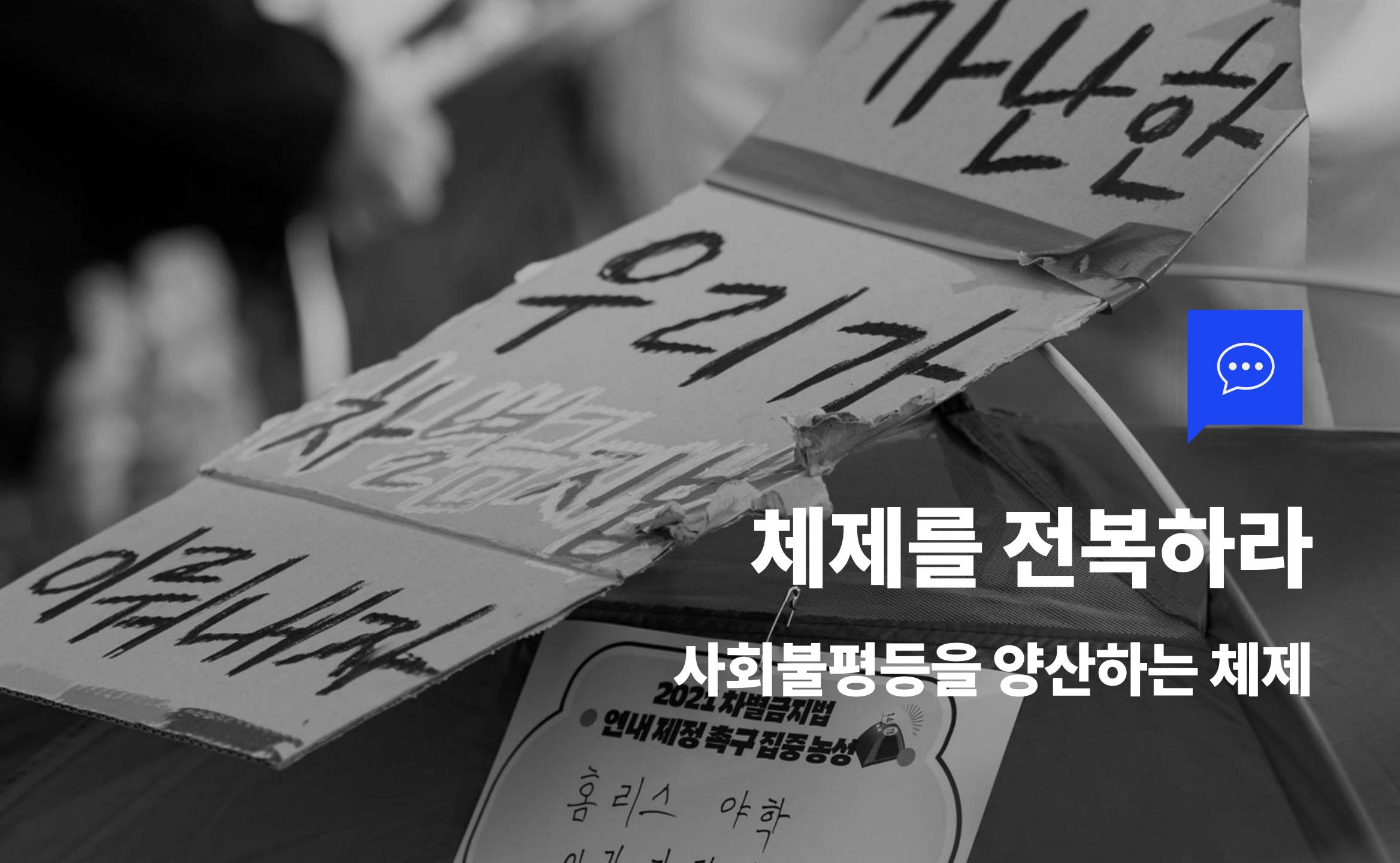


기후위기에 적은 책임을 갖는, 하지만 큰 피해를 입는 ‘기후위기의 최전선당사자’ 집단의 권리 확장이 ‘정의’

## 정의로운 그린 뉴딜의 수단 및 핵심과제

배출제로를 위한 구조적 변화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평한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시간의 단축,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농업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농민수당,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의 모든 이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마련되어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역분권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 김선철, 한재각, "기후재난시대, 그린뉴딜의 원칙: 정의로운 그린뉴딜" <코로나와 기후재난시대, 어떤 그린 뉴딜이 필요한가?> 토론회, 기후위기비상행동, 2020.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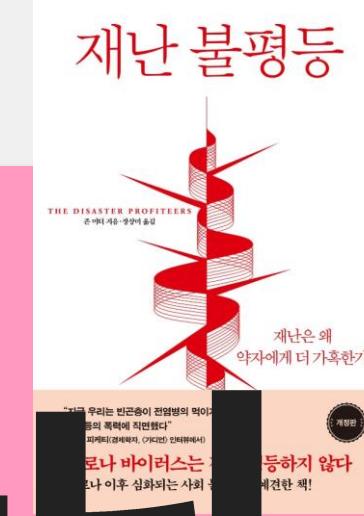
# 체제를 전복하라

## 사회불평등을 양산하는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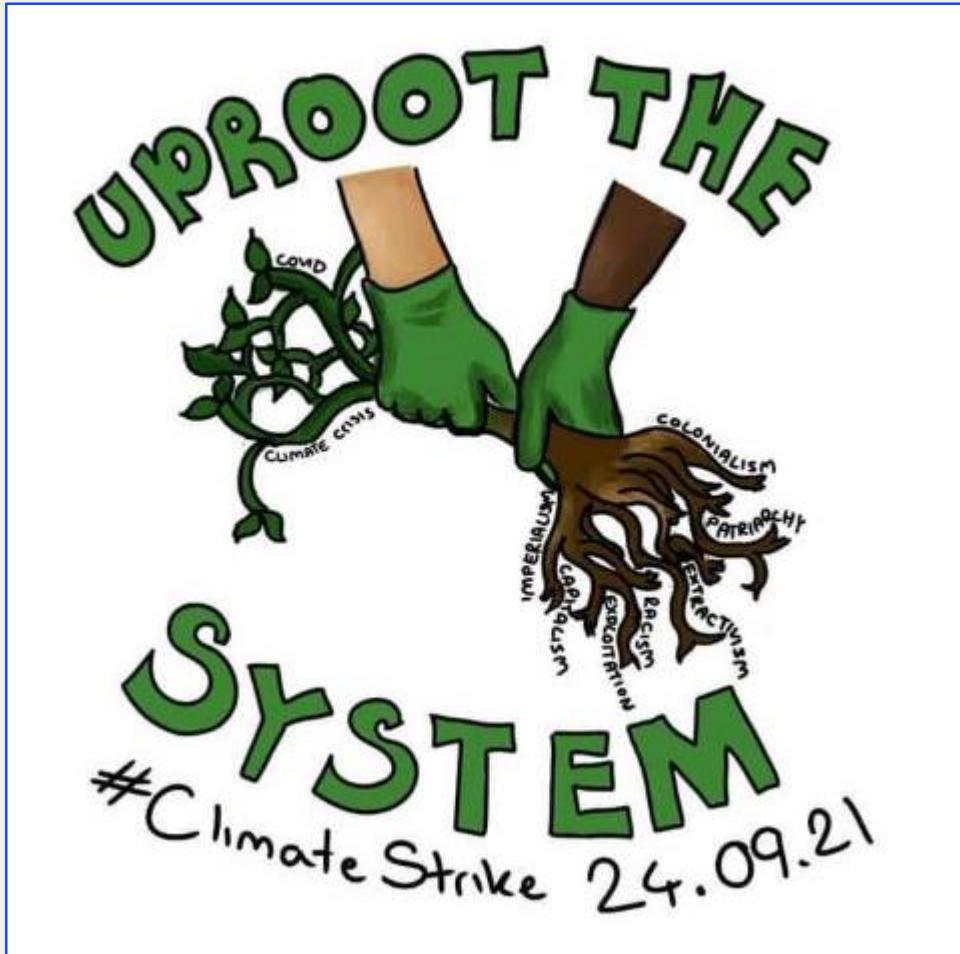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집중농성

홈리스 약학

# 기후위기 개선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면



# 기후위기, ‘체제’의 문제



‘체제를 전복하라 Uproot The System’

식민주의 Colonialism

가부장제 Patriarchy

추출주의/채굴주의 Extractivism

인종주의 Racism

착취 Exploitation

자본주의 Capitalism

제국주의 Imperialism

.

.

.

# 공공·민주·생태 에너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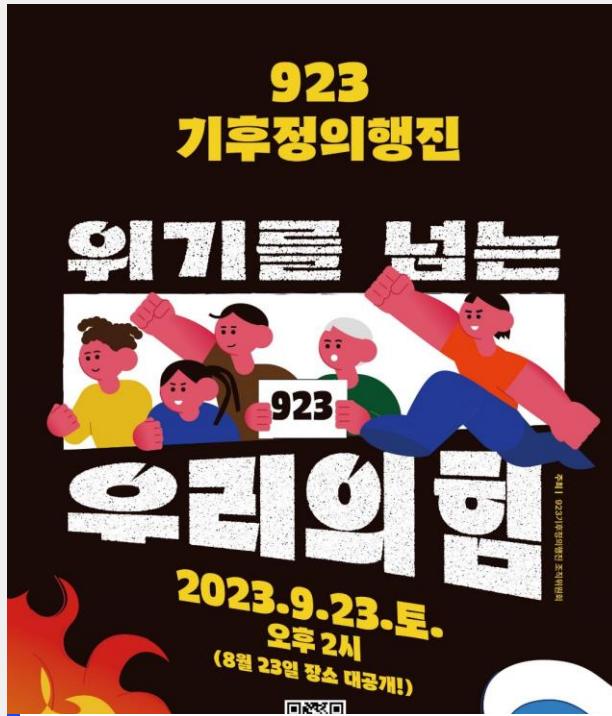
서울~부산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kg, 이산화탄소 환산)

교통수단	항공	철도	버스	승용차 (휘발유)	승용차 (경유)	승용차 (하이브리드)
배출량	8000	5299	291	50	43	38
1인당 배출량	53.3 (150명 탑승 기준)	5.9 (900명 기준)	10 (28명 기준)	50	43 (승용차는 일반 대중급 기준)	38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결국 에너지 수요 감축, 특히 탄소배출이 높은 도로-자동차 산업의 축소 없이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

# 공공·민주·생태 에너지 전환



## 923 기후정의행진 5대 요구안

- 1)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 2)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에너지’가 존엄한 삶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라면

공공교통 시스템 구축으로의 전환, 이윤 중심에서 대안적인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도로-자동차 중심 교통체계 → 공공철도 중심 전환, 접근성과 이동성을 강화 : 기후위기시대의 ‘사회공공성’

# 전환, 민주적 계획과 통제는 어떻게?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이 아닌  
취약계층과 교통약자,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주민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공교통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2022.2.17  
*<2022 대통령선거 각대선캠프 초청 -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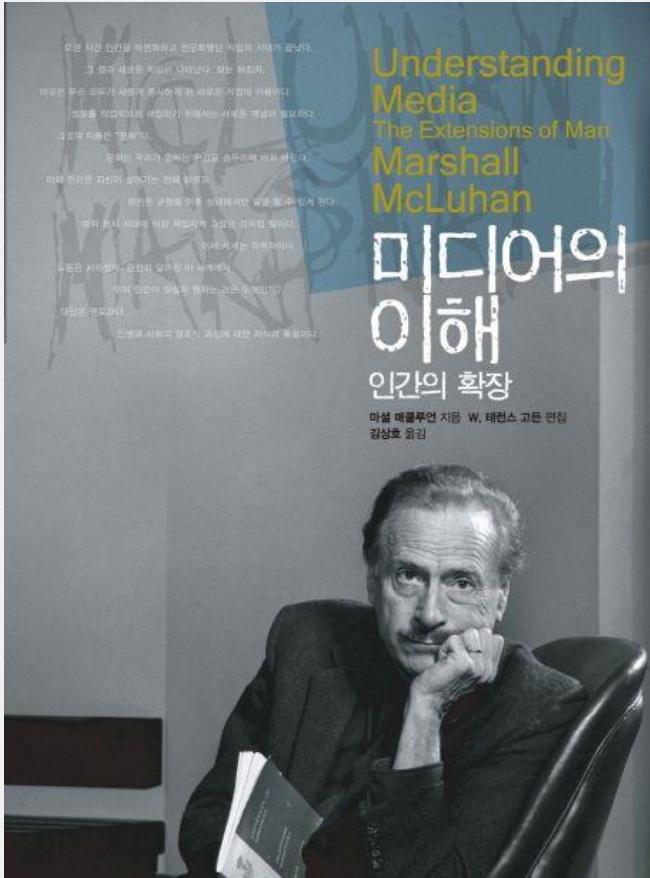
▼ 박홍수(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文대통령도 말한 '대동맥' 철도,  
'모달시프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프레시안> 2021.1.5.

도로 건설-자동차 산업 중심의 이윤 경제체제 (경기도 승용차 이용자 대비 버스 이용자 생활교통비 1.3배)

저소득-고령층-지역 불평등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운행 축소, 지역 간 이동 및 접근성 제약 등)

성차별 구조 (2018 <대도시 교통비 지출 현황> 자가용족의 81.4%는 남성, 대중교통 여성 비중 80.0%)

# 전환, 민주적 계획과 통제는 어떻게?



## 인간·몸의 확장(extensions)으로서 미디어

마셜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TV, 인터넷, 도로, 종이, 자동차, 옷, 돈, 시계, 게임, 주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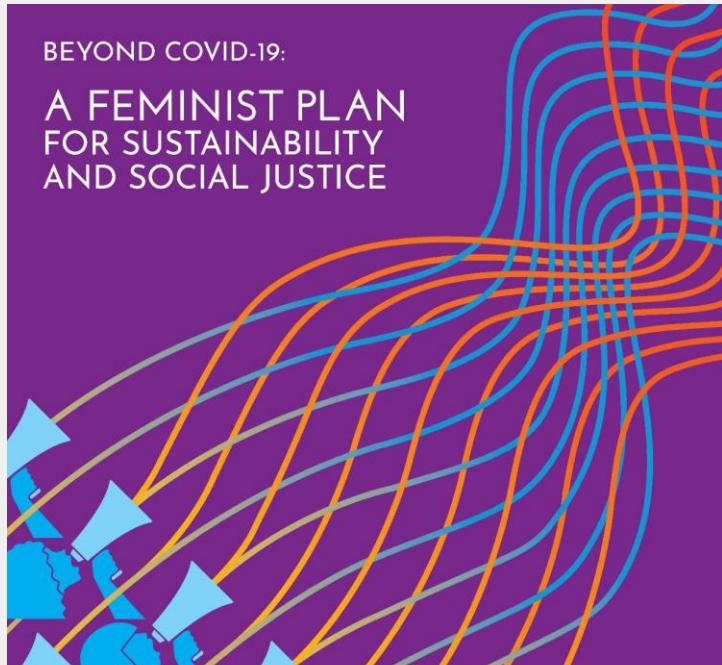
“자동차에 관한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은 자동차가 어떤 말보다도 기수를 슈퍼맨으로 만드는 인간 확장의 형태라는 것이다.”

“모든 사회적 거리를 평준화하고  
보행자를 한 계급 아래의 시민으로 만든 것이 바로 자동차의 힘 힘이다.”

“남부에서 백인과 흑인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를 평등하게 만든 것은 자동차와 트럭이지,  
그런 현상이 도덕적인 견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성차별 구조 (2018 <대도시 교통비 지출 현황> 자가용족의 81.4%는 남성, 대중교통 여성 비중 80.0%)

# 전환, 민주적 계획과 통제는 어떻게?



“포용적인 페미니즘 정치는 다양한 관점을 대표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공통의 의제와 연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 모든 사람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를 위해 성평등, 사회정의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진보적 동맹을 촉구합니다.”

- UN WOMEN (2021)  
『Beyond Covid-19: A Feminist Plan for Sustainability and Social Justice』  
(코로나19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사회정의를 향한 페미니스트 계획)

**이윤-성장 중심 경제체제, 돌봄과 사회재생산 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체제의 위기**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불이익’으로 설명하기(뒤쳐지는 사람에 대한 분석) 넘어+**

**종속과 특권이 연동된 체계 : 교차하는 형태의 억압을 영속화하는 인식, 이해관계, 제도, 구조를 파악하기**

# 기후정의X존엄과 평등

기후위기  
최전선당사자  
기후정의운동

사회정의  
체제전환

사회적 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Goal

지배기회의 평등, 패배자/꼴지 혐오(last-place aversion) → 전환를 주동할 사회적 연대 세력으로





# 모둠 : 함께 이야기 나누기

**내가 주목한 현실 : 내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한 계기**

- 자기 경험 혹은 주변 이웃, 친구들의 경험도 OK + 차별사유 떠올리며

**내가 제기하고 싶은 권리  
: '기후불평등'을 넘어서 위해서 필요한 조건**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평등의 (선언) 한 문장**